

민생안정부터 미래전략까지 도정 점검

김 지사, 안전등 전분야
설명절 민생안정 대책 강조
미래전략산업 육성 대응
완주전주 행정 통합따른
실질적 상생방안 마련 추진



3일 전북특별자치도 종합상황실에서 김관영 도지사 주재로 합동 간부회의를 갖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3일 김관영 도지사 주재로 간부회의를 열고 설명절 민생안정 대책을 비롯해 도의회 협력 강화 중앙정부 소용체계 구축 새만금 사업 대응 미래전략산업 육성 등 도정 전반의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먼저 김관영 도지사는 "설명절을 앞두고 물가 안정과 민생 부담 완화, 안전 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했다. 성수품 가격 동향을 집중 관리하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비상진료체계 및 특별교통대책을 가동하는 등 도민이 더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계할 수 있는 종합적인 민생안정 대책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고 이를 위해 명절 기간 민생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24시간 대응체계를 유지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도의회의와 소통과 협력 강화도 강조했다. 최근 마무리된 실국별 업무보고와 관련해 도의회의 건설풍 인적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한 피드백과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사실관계에 오해가 있는 사안은 실국장이 직접

설명하는 등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도록 당부했다. 또한 자료 제출과 관련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유와 범위를 명확히 설명하는 등 소통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제9기 새만금위원회 출범에 따른 대응과 관련하여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재생에너지 확충 기반시설 조성, 메가 샌드박스 지정 등 주요 안건에 대해 새로 출범한 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하며, 특히 투자유치 분야를 중심으로 이차전지, AI 등 첨단산업 분야 기업유치 성과와 직결된 사안임을 감안하여 도정 현안을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미래 인재와 신산업 대응을 위한 2026년도 인공지능(AI) 중심대학 공모와 양자과학기술·양자산업 육성 종합계획에도 도내 대학 및 기업, 연구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전략적으로 빈틈없이 대응할 것을 주문했으며, "도의 피지컬 AI, 첨단제조, 방산, 에너지, 바이오 등 전북 전략산업과 연계한 인재 양성도 기술 실증 산업 확장 모델을 발굴하라"고 지시했다.

마지막으로 완주·전주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해 "도는 이를 단순한 행정구역 변경이 아닌 전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존 전략으로 보고, 광역 행정 통합에 준하는 국가 지원과 완주와 전

주가 함께 이익을 나눌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특별법 마련 등 실질적인 상생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전북특별자치도 내 중추도시 형성 모델로서 3북 인센티브 지원의 대표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할 것"을 지시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민생안정을 기본으로, 미래 전략까지 아우르는 도정 전반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전북 대도약의 기반을 차근차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산 산복도로 조망 명소 이바구캠프 새로 문 연다”

김윤덕 국토부장관



이 변화하면서 방문객의 발길을 다시 이끌기 위한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카카오 등 4개 기관은 도시재생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공동이용시설 활성화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그 첫 사례로 이바구캠프 새단장을 추진했다.

새롭게 단장한 이바구캠프는 기존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쾌적하게 리모델링하여 방문객의 편의

를 배려할 수 있는 '조망 명소'에 위치해 있다.

초기에는 활발하게 운영되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시설이 노후화되고 숙박 시설 트렌드 등이 변화하면서 방문객의 발길을 다시 이끌기 위한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카카오 등 4개 기관은 도시재생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공동이용시설 활성화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그 첫 사례로 이바구캠프 새단장을 추진했다.

새롭게 단장한 이바구캠프는 기존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쾌적하게 리모델링하여 방문객의 편의

운영기간을 거쳐 3월 1일 정식 개관한다.

4일 개최하는 재개관 행사에는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을 비롯해 가가오, 부산광역시 동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참석해 이바구캠프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고 변화된 시설을 직접 둘러볼 예정이다.

이바구캠프는 여행·숙박 플랫폼 또는 전화를 통해 이용 예약이 가능하며, 3월 정식 개관과 함께 예전과 같은 활력을 되찾고 지역의 '문화·관광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김이탁 제1차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도시재생이 조성된 공간을 가꾸고 내실 있게 운영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할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며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만들어진 공간들이 시대 변화에 맞춰 주민과 방문객에게 꾸준히 사랑받을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운영 관리'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6월 지방선거, 저도 축하합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김제 만들겠다” | 임도순씨, 김제시장 ‘출사표’



김제시의 현실적인 과제로 △고속철도 역사 신설 △공공의료원 설립 △대학 유치 등 세 가지 핵심 공약을 제시했다.

먼저 고속철도 역사 신설과 관련해 "8만2,000여명의 김제 시민은 물론 전주·완주 외곽과 부안 일부 지역까지 흡수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에 새로운 역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두 번째로 공공의료원 설립을 약속하며 "김제는 뇌출혈·심혈관 질환 등 골든타임이 중요한 응급질환에 취약한 지역"이라며 "전주나 익산까지 이동하는 데 최소 20~30분이상이 소요되는 현실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시장으로서의 모든 특권을 내려놓고 저 자신부터 변화하겠다"며 정치 색인 의지를 분명히 했다.

임도순 씨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반성하며 성장하는 정치, 그리고 차근차근 앞으로 나아가는 정치가 필요하다"며 "강력한 변화가 있어야 김제가 다시 숨 쉬고 사람이 모이고 상권이 살아난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의료원이 설립되면 김제뿐 아니라 완주 외곽 부안 일부 지역 주민까지 포괄하는 광역 의료 거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 번째로는 대학 설립 구상을 제시했다. 임 씨는 "과거 벽성대학교 폐교 이후 방치된 부지를 적극 활용해 서해안 시대에 걸맞은 대학을 유치하겠다"고 말했다.

임도순 씨는 끝으로 "민약 제가 시장에 당선된 이후 더 노력 있고 김제시를 잘 이끌 수 있는 분이 나온다면 시장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지리는 목표가 아니라 김제를 바꾸는 수단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임도순 씨는 김제 원평초, 금산중, 전주중앙고를 졸업하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농학과를 졸업했다.

방송통신대 전북지역 제15대 총학생회장과 총동문회 사무국장을 역임했으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이재명 대통령 선거에서 전북 직능 특보단으로 활발한 선거유세 활동을 지원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 대광위 “오늘부터 전국민 모두의 카드 이용 가능”

그동안 일부 지역 주민만 이용할 수 있었던 대중교통비 환급 제도 '모두의 카드(K-패스)'가 4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2월 3일, 그동안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전남·경북 지역 11개 지방정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전국 229개 모든 지방정부가 K-패스 사업에 참여하게 됐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교통비의 일정 비율을 환급해 주는 교통복지 제도로, 국비와 지방비가 함께 투입된다.

그동안 일부 지방정부의 미참여로 지역 간 혜택 차이가 있었으나, 이번 협약으로 이러한 사각지대가 해소됐다.

새롭게 참여한 지역 주민들도 2월 4일부터 K-패스 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지방비는 각 지방정부가 추경을 통해 확보할 예정이다.

K-패스는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신분당선, GTX 등 주요 대중교통수단에서 사용 가능하며,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금횡령 교사, 교장 추천 묵과할 것인가?’

“전북교육청의 책임 있는 판단 필요” 목소리

공금 횡령 전력이 있는 교사가 교장 자격연수 대상자로 추천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육 현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책임 있는 판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최근 도내 한 사립학교 재단이 과거 공금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교사를 교장 자격연수 대상자로 추천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교장 자격연수 대상자 추천 기준에는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상 '대 주요 비위와 그에 준하는 비위 전력'은 징계 기록 말소 여부와 관계없이 연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다.

문제가 된 교사는 2017년 학교회계 공금을 횡령해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 금액을 부풀려 예산을 집행한 뒤 외부 업체를 통해 공금을 되돌려 받는 방식이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를 두고 단순 행정 착오가 아닌 직무를 이용한 사적 이익 취득이며, 학생 교육활동에 쓰여야 할 예산을 사적으로 전용한 중대

한 비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사립학교 관리자 선발 과정의 검증 체계가 미흡하다는 구조적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교장 후보 추천이 법인 이사회 판단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에서 공개적이고 책임 있는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중대한 비위 전력에 있는 인사가 학교 관리자로 선발되는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다.

교육 현장의 신뢰를 위해 교육청과 학교법인이 보다 엄정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도 잇따르고 있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해당 교사에 대한 교장 자격연수 대상자 인정 여부 재검토 △재단이 사회의 추천 근거 및 징계 전력 검토 과정 공개 △사립학교 관리자 선발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 등을 촉구하고 있다.

교육의 공공성과 도덕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이번 사안에 대한 교육당국의 판단이 향후 학교 현장의 신뢰 회복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오상근기자

전북 사법서비스 개선 ‘전환점’

이성운 의원 발의 전주가정법원 설치법, 국회 법사위 1소위 통과



더불어민주당 이성운 의원(전주)이 대표법원의 한 '전주가정법원 설치법'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원회

사법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가정법원은 가사사건과 소년보호·아동보호 사건 등을 담당하는 전문법원이지만, 현재 전북에는 가정법원이 없어 전주지방법원이 관련 사건을 모두 처리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전주지방법원의 가사사건 처리 건수는 울산지방법원보다 연평균 200건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나, 전담 법원 설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성운 의원은 "전주가정법원 설치본원을 설치하고, 군산·정읍·남원에 가정법원 지원을 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전북 지역의 가사·소년 사건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완주·전주 통합, 선언 넘어 실행 단계로’

‘전주시장 출마’ 국주영은 도의원, ‘전북 국회의원 3명 행정 통합 전격 추진 환영... 전북 미래 좌우할 중대 결단’



전주·완주 행정 통합 논의가 정치권의 공식 선언을 계기로 본격적인 실행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주영은 전주시장 출마를 선언한 국주영은 전북특별자치도의원이 전주·완주 통합 전격 추진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주영은 도의원은 3일 입장문을 통해 "전주·완주 통합은 더 이상 선언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이제는 실행으로 나아가야 할 시점"이라며 "이번 정치권의 결단은 전주와 완주를 넘어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를 좌우할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국주영은 도의원은 특히 전날인 2일, 안호영 국회의원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이성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윤덕 국회의원의 뜻을 모아 '전주·완주 행정 통합 전격 추진'을 공식 선언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여기에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이원택 국회의원까지 동참하며 전북 정치권이 하나의 목소리를 낸 점에 대해 "전북 정치권이 오랜만에 '원팀'으로 뜻을 모은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수도권과 부울경, 광주·전남

등 이른바 5대 메가시티는 이미 체급을 키우며 독자적인 성장 궤도에 올라서고 있다"며 "반면 전북은 특별자치도라는 지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견인한 메가시티급 성장 엔진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대로라면 전북은 거대 도시권 사이에서 경쟁력을 상실한 채 단순한 '통로'로 전락할 수 있다"며 "전주·완주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의 결합이 아니라 5급·3북 체제 속에서 전북민의 독자적인 성장축을 만드는 전략적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국주영은 도의원은 전주·완주 통합이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위한 선결 조건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정부의 파격적인 특례와 대규모 예산 지원은 결국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는 지역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며 "전주와 완주가 분절된 구조로는 5급과 경쟁하며 대형 국제사업을 유치하는 데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전주·완주가 하나로 통합돼 100만 경제권의 위상을 갖추게 될 때, 비로소 전북특별자치도에 부여된 자치권과 산업 특례가 실질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다"며 "통합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전북의 특별함은 제도적 수식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오만호기자